



문 의원님께서서는 그간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해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그리고 진주의료원 사태 관련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주요 현안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기본방향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와 '선별급여'로 분류하고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 드리자면,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급여'에 포함시켜 급여화 하는 한편, 비용 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최신 의료서비스에는 '선별급여'를 도입하여 건강

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향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이 2016년까지 연차별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저는 정부의 일정별 추진계획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발생된, 그리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강원도 기관보고, 그리고 진주의료원, 서울의료원, 의정부의료원의 현장검증을 거치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그리고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확립 방안 등에 대한 질의와 대안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를 들자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경쟁보다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 공공의료 지원체계 확립방안으로

서 '공공의료기금' 설치 및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는 방안, 그리고, 지방의료원에서 의료급여환자 진료 시 중별 가산을 차이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실에 대해 보전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7월 10일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결핵이 문제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 특별히 북한 결핵 문제에 주목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병관리본부 통계 상 2011년 우리나라 결핵 발생 환자는 39,557명으로, 전체 감염병 환자 98,717명 중 가장 많은 40.1%를 차지하였으며, 한 해 동안 2,300여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결핵퇴치와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라는 국회 세미나를 이번에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등 국격이 높아지고 있지만, OECD 가입 34개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보다 더욱 심각한 북한의 결핵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결핵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더 나아가 한반도 전체가 결핵 청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한 결핵문제에 주목해왔던 계기는 제가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님, 민주당 김춘진 의원님, 그리고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와 함께 올해 1월 「통일의학포럼」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2차례의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북한 의료의 최대 현안인 결핵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이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결핵퇴치 사업 지원이 연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핵을 포함한 북한 보건의료지원은 어떠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북한의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신다면? 북한은 경제상황 악화로 영양 결핍, 평균수명 감소 등 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으며 각종 감염병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고통과 불안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 또한 총체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지만, 남북 간의 신

뢰 회복을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북한 주민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은 이러한 정치적 여건과 결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 보건의료 지원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북한 주민에게 인도주의, 생명존중정신에 입각하여 삶의 희망, 그리고 따뜻한 인류애를 전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중요성은 더 할 나위가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이며, 경색된 남북 간의 정치적 분위기 전환과 함께 타 분야의 교류, 협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편, 그간 북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정부기관들은 효율적 역할 분담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중복 지원되는 등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 온 점도 있었으며, 이에 여러 전문가들은 국제원조기구들과의 교류 활성화 및 지원기관들과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 보건의료 지원의 성패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함 안전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북 보건의료지원 전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전략 하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7월 10일 정책세미나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그간에 견고히 구축해 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민간단체들은 병원 등 의료시설 건립 및 현대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원, 감염병 퇴치, 환경위생 개선, 보건의료 인력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가 민간단체들과 보다 유기적으로 상호보완적 업무공조를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대북 지원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세계]는 결핵을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에게 바쁜 일정을 모두 소화하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문 의원님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특별한 건강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24시간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성원이 제 건강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